

● **재임용 탈락 교수 복직 길 열린다**

부당하게 재임용 탈락된 교수들이 강단에 복직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국회 법사위원회는 4월 28일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이 지난해 10월에 의원발의한 '대학교원기간재임용탈락자구제를위한특별법안(이하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소청심사위원회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 재임용 탈락 교수들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벌이게 된다.

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법조인과 교육 전문가 5~9인으로 구성되며, 재임용 탈락 교수에 대한 재임용 심사와 관련 소송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재임용 탈락 교수들은 법안 통과 후 6개월 이내에 재심 신청을 해야 하고, 특별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를 벌여 구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의 구제 결정이 내려지면 해당 대학들은 대학 차원의 심사과정을 거쳐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심사 결과에 불복한 교수들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소청심사위원회가 재임용 결정을 내린 사안에 대해 해당 대학이 불가 판

정을 내리면 다시 위원회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다.

정년을 지난 교수들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의·치학전문대학원 전환, BK21 평가 반영**

교육인적자원부는 5월 4일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추가전환 대학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2008년과 2009년 중에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으로부터 5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 승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5월 에 강원대, 건양대, 전남대, 제주대, 충남대 등이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희망하고 있었고, 연세대와 가톨릭대, 중앙대 등도 전환 여부를 논의하고 있어 최소한 6개 대학 이상이 추가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로 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는 대학은 국립대 교수 정원 증원을 비롯해 교육과정개발비와 실험실습장비 구입비로 대학당 7~1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특히 내년부터 시작되는 2단계 BK21 사업 평가시의·치의학 전문대학원 전환 여부를 평가기준에 반영할 방침이다.

현재까지 전문대학원으로 전환

을 확정된 대학은 모두 16개 대학으로, 올해 충북대 등 9개 대학이 전환을 완료했고, 내년 중 부산대 등 6개 대학이, 2007년에는 이화여대가 각각 전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추가로 6개 내외 대학이 전환할 경우, 전국 41개 의과대학 가운데 약 40%인 15~17곳이, 그리고 6개 치의과대학 가운데 55%인 6곳이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했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일부 대학에서는 2010년이 되면 의과대와 치과대로 되돌릴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고 있는데, 그런 일은 절대로 없다"며 "현행 의·치의과대학과 전문대학원 이원체제를 유지할지 의·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일원화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차관보는 "전문대학원 전환을 정책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2단계 BK 21 사업 선정때 평가기준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 **경영, 금융, 물류 전문대학원 2007년 도입**

의학·치의학 및 법학뿐 아니라 경영(MBA), 금융, 물류 분야도 이르면 2007학년도부터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되고, 한국무역협회 등 경제단체나 대기업의 단설 전문대학원 설립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제2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이 시작되어 생명공학, 기초과학 등 유망산업을 이끌 핵심연구 인력이 연간 2만 명 양성된다.

이를 위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가 출범하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차관급이 본부장인 인적자원혁신본부가 설치된다.

정부는 5월 19일 노무현 대통령이 참석한 인적자원개발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인적자원 개발 추진 체제 개편안'을 확정하고 특성화를 위한 대학 혁신 방안도 논의했다.

정부는 회의에서 고급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기초응용과학 등의 분야에서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보다 강화된 2단계 BK21 사업을 통해 핵심 연구인력을 연간 2만 명 양성하기로 했다.

또 의학·치의학 및 법학 전문대학원 체제가 조기 정착되도록 유도하고, 국제 수준의 전문가 양성이 시급한 경영(MBA), 금융, 물류 분야도 이르면 2007학년도부터 학부 중심에서 전문대학원으로 바뀌 현행 경영대학/학과의 전환을 권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 특별법 등을 제정해 경영 전문대학원 도입 등을

법제화하고 내년께 세부 규정을 마련한 뒤 설립신청 접수 및 심사, 인가 등의 과정을 거쳐 2007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뽑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무역협회, 통합증권거래소 등 경제단체나 대기업의 단설 전문대학원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도 본격 추진하고 외국 경영 전문대학원의 국내 진출 여건도 마련해줄 방침이다.

경제단체 등이 운영하는 전문대학원에 대해서는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특례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산업수요에 맞는 중견 기술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대학 혁신역량강화(NURI)' 사업을 통해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된 지방대 특성화 분야를 집중 육성하고 수도권 대학 특성화 지원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산업현장 실무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실업고-전문대-산업체 협약학과 제도'를 도입하고 명문 특성화고를 2010년까지 2백 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경쟁시스템 도입(정보공시제 시행, 전문기관 의 학문분야별 평가, 인증, 국립대 총장간선제 원칙과 법인화 허용)

▲부처 간 대학 재정지원 사업 연계 ▲인력 수급 전망 정보 제공 ▲ 전국 단위 산학연계 프로그램(Connect Korea) 구축 등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가적이고 전략적인 투자와 관리를 위해 교육부 총리가 의장인 인적자원개발회의를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산업, 노동계 대표와 민간전문가도 참여시키기로 했다.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부에 인적자원혁신본부가 설치된다.

### ● 사립대 정원 강제 감축

교육인적자원부는 대학이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대학 구조개혁 및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 정원 감축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문대 야간 정원을 주간 정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대학원 석사 정원을 박사 정원으로 자체 조정하는 경우에도 종전 1 대 1 방식이 아니라 수업 연한을 고려해 2 대 1 또는 1.5 대 1 등으로 조정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학년도 대학(원)과 전문대 학생 정원 책정 기준 및 조정 계획'을 마련, 5월 17일 각 대학

에 통보했다.

계획에 따르면 국립대는 2007년까지 입학정원을 10% 이상 의무적으로 감축하되, 획일적으로 줄이지 말고 특성화나 중장기 발전 방향, 사회 인력 수요, 학생 충원율·취업률 등을 감안해 감축 분야나 인원을 결정하도록 했다.

사립대에 대해서도 교육여건 개선과 특성화 실적을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하고, 교육부가 제시한 연차별 전임교원 확보율을 채우지 못하면 2009학년도부터는 정원을 강제로 줄이기로 했다.

사립대가 입학 정원을 늘릴 수 있는 기준도 2005학년도 교원과 교사 확보율 각각 100%와 수익용 기본재산 및 교지 확보율 각각 70% 이상에서 2006학년도에는 각각 85% 이상으로 상향조정했다. 본교나 분교가 아닌 캠퍼스의 경우 본교와 통합해 정원을 관리했으나 앞으로 캠퍼스별로 관리하고 교사·교지도 100% 이상 확보하도록 했다.

전문대는 비교우위 특성화 분야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자체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야간 정원의 주간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대학원은 충원율이 낮거나 사회 인력수요가 적은 분야 정원을 감축하고 소규모 대학원 통폐합과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동시에

석사과정 정원을 박사과정으로 자체 조정할 때도 종전에는 1 대 1로 교환했으나 올해부터 수업 연한을 고려하도록 했다.

따라서 지금까지는 수업 연한 3년의 박사과정을 20명 늘리기 위해 석사과정을 20명 줄이면 됐지만 앞으로는 30명 감축해야 한다. 의·치의학, 법학 등 일부 분야를 제외한 전문대학원 신설도 억제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대학 특성화와 합리적인 정원·학과 개편을 유도하기 위해 산업·직업별 인력수급 전망, 취업실태 분석, 지역별 전략산업, 시·도별 학생 예측 통계 등의 자료나 정보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 ● 대학 학자금 대출 쉬워진다

올 2학기부터 대학생 학자금 대출 방식이 현행 이자 차액보전 방식에서 학자금 대출 신용보증기금 신설을 통한 정부보증 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대출 절차가 한결 간소해져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안을 마련, 올 2학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5월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정부보증 방식이 시행되면 학부모나 보증보험회사가 보증하는 방식보다 대출금

리가 8.25%에서 6.5% 안팎까지 내려가고 기금재원의 20배까지 보증할 수 있어 1,000억 원이 확보될 경우 1명당 400만 원씩 연간 50만 명이 대출받을 수 있다.

또 현재 등록금(총 2,000만 원)만으로 되어 있는 대출 범위가 생활비(총 4,000만 원)까지 포함되고 상환기간도 7년 거치 7년 상환에서 10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늘어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특히 학부모 연대보증 없이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학자금 대출은 학생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나중에 이자 일부(2005년 기준 연리 8.25% 중 4.25%)를 정부가 보전해 주고 있으나 은행이 위험을 줄이기 위해 학부모 연대보증이나 보증보험회사 보증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이뤄져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그림의 떡'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1학기 대학이 추천한 19만 명 중 실제 대출받은 학생은 13만 명에 그쳤고, 차액 보전을 위한 정부 재정부담도 2004년 912억 원, 올해 1,062억 원에 달했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1차 대출 대상자 선정 때 학점과 학교생활

등의 기준을 통해 적격자를 선발하도록 하고, 미상환 학생의 비율이 높은 대학에는 불이익을 주는 한편 금융기관 회수 책임을 높이기 위해 금융기관에도 책임을 부여할 방침이다.

● **이사장 취임 교육인적자원부 승인 폐지**

앞으로 사립대학 재단은 이사장 취임 및 임원 해임에 대해 교육당국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5월 23일 대학 자율화 추진의 일환으로, 학교법인 및 학교 운영에 관한 거의 모든 사항을 담은 학교법인 정관준칙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학교법인 정관은 학교법인의 조직과 활동의 기본사항을 정한 규범으로, 정관준칙은 학교법인 설립 시 정관작성의 모형을 제시하고 정관변경 인가 때를 기준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법인 설립 시 반드시 정관준칙을 따라야 한다는 근거 조항이 없음에도 실질적으로 학교법인의 정관작성을 구속하는 새로운 규제로 작용,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관련 법령에서 예·결산 자문위원회, 대학평의회, 교원인사위원회, 사무기구 등의 설치 및 운영과 사무직원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정관에 의한다'고 규정해 놓고 상세한 조항을 준칙으로 다시 제시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자, 이번에 정관준칙을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사립학교 임원 해임 및 이사장 취임에 대한 관할청 승인이 폐지되며, 학교법인이 예·결산 자문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를 운영할 때도 정관준칙 적용을 받지 않고, 법인 특성에 맞는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구성이 가능하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정관준칙 폐지 후 신설법인 등의 불편을 줄여주기 위해 사립학교법 등 법령에 의해 학교정관에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참고자료로 제공할 예정이다.

● **고등교육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부터 대학이 교원 확보율,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재정 현황 등의 주요 정보를 공개하는 '대학 정보공시제'가 시행되며, 정보공시를 하지 않으면 행·재정상 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4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률안에 따르면 대학은 ▲학교조직 및 전공 설치현황 ▲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학생모집, 등록, 재학 및 졸업 ▲학사운영 ▲학교재정 ▲교원의 연구 및 교육 등의 정보를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교육부는 각 대학이 공개한 정보를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이를 공개할 수 있으며, 대학이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 공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재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정보공시제가 도입되면 학생과 학부모, 산업체 등이 다양한 정보에 근거해 대학을 선택할 수 있다"며 "대학간 경쟁을 통해 교육 및 연구역진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공립대 총장 간선제 법제화**

국·공립대 총장을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선임하는 총장 간선제가 법제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국 국·공립대학교수협의회(이하 국교협)가 총장 간선제 전환과 총장 직선제의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등에 반대하는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6월 2일 “국·공립대 총장 선거는 대학 내외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총장추천위원회에서 총장을 선임하는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되 대학 구성원 과반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직선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 교육공무원법은 간선과 직선을 대학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립대는 직선제를 시행하고 있다.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월 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기자 정례브리핑에서 “국립대 총장 직선제가 대학 자치에 기여한 것은 맞지만 파벌 형성과 과열 선거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총장의 지도력 약화로 대학 경영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며 총장 간선제 추진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앞서 같은 달 3일 국·공립대가 현행 총장 직선제를 계속 실시할 경우 관할 선관위에서 총장 선거에 관련된 업무를 위탁관리하도록 규정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의원 입법으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당시 총장 선거방

법을 간선제로 전환하는 내용은 명문화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총장 간선제 전환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공립대 총장 선거는 간선제를 원칙으로 하고, 대학 구성원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만 직선제를 실시하되 관할 선관위에 선거관리를 위탁하는 내용이 완전 명문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국교협은 “개정 교육공무원법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한 데 이어 헌법소원을 추진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 ● 대학평가 행·재정 지원 연계

내년부터 대학과 학문 분야별, 정부 지원 사업평가 결과가 관보나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되며, 평가결과는 정부 행·재정 지원과 연계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평가 전담 기구인 가칭 ‘한국고등교육평가원(이하 평가원)’이 내년 상반기에 설립돼 대학평가를 총괄하고, 국내·외 전문평가기관에 대한 인증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평가체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가칭

‘고등교육평가에 관한 법률’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평가원은 대학 기관 평가와 학문 분야별 평가, 사업평가 등을 총괄하게 되며, 평가 결과는 일반에 공개되고, 정부의 재정 지원 사업과 학위과정 설치, 학과 증설 등 행·재정 정책과 연계된다.

우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의 종합평가에 해당하는 대학기관 평가는 대학 및 전문대,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등 모든 고등교육기관의 교육, 연구 수준 등을 종합평가하게 된다.

기관 평가는 대학의 신청을 받아 대학의 규모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정보공시제에 의한 대학의 기본 여건과 특성화 계획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또 공학, 의학, 간호학, 건축학 등 학문 분야별 민간 평가기구에 대한 인증 등을 통해 학문 분야별 평가를 시행하며, 누리(NURI) 사업과 특성화 등 교육부 및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정부 재정지원 사업을 총괄 평가하게 된다.

대학기관 평가의 경우 대학의 신청을 받아 평가가 이뤄지나, 평가 결과가 일반에 공개되는 데다, 정부 행·재정 지원과 연계됨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학과나 학부, 전문대학원 등 학문 분야별 평가는 평가원이 국내외 민간 평가 기관의 신청을 받아 분야별로 한 곳씩을 인증, 이 인증 기관에서 주기별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인증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평가원이 직접 평가를 할 수도 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새로 설립되는 평가원은 특수법인 형태의 정부출연기관으로, 경제사회단체와 대학 총학장협의회, 정부 추천 인사 등 12명 이내로 이사회를 꾸리고, 국내외 평가전문가 55명 등 80명 내외로 구성할 방침이다.

아울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미국 랜드(RAND) 연구소 등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해 국제 기준에 적합한 평가체제를 갖출 예정이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보는 "대학별 순위 공개를 어느 수위까지 할지는 평가원의 이사회와 대학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며 "평가체제 개편을 통해 대학 특성화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 올해 누리사업단 7곳 선정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17일 올해 누리사업 선정결과, 경상대, 충남대, 동신대, 한림대, 부경대, 공주대, 예원대 등 7개 사업단이 최

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신청서를 제출한 총 1백5개 사업단 가운데 선정된 대·중·소형 7개 사업단에는 총 2백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지원사업단은 국립대 4곳, 사립대 3곳으로, 분야별로는 BT 분야가 3곳(대형 2곳, 중형 1곳), 문화·관광 2곳, 사회복지 1곳, 기타 1곳 등으로 나타났다.

중심대학을 기준으로 사업단의 신청 금액을 보면, 동신대가 50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남대 47억 원 ▲경상대 45억 원 ▲한림대·부경대 각 30억 원 ▲공주대·예원대 각 10억 원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평가위원들의 컨설팅을 통해 사업단별 지원액을 최종 결정, 올 예산 2백억 원에 맞춰 지원하였다. 선정사업단은 교육부장관과 성과 협약을 체결하고 7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였다. 사업비는 7월 1일자로 지급되었다. 올 누리사업은 구조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사업 참여 요건이 교원 확보율의 경우 50%에서 56% 이상으로, 신입생 충원율은 60%에서 80% 이상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으며, 2006학년도 입학정원 2천1백34명이 감축됐다.

이로써 누리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1백12개 사업단을 포함해

올해부터 모두 1백19개 사업단에 2천4백억 원을 지원하게 됐다.

한편 교육부는 선정 사업단 외에 예비 선정 사업단 24곳의 명단을 함께 발표했다. 예비선정 사업단은 연차평가 결과 사업추진 실적이 부진한 사업단의 사업비를 삭감하거나 추경 편성 등을 통해 사업비가 확보되면 순서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연차평가는 지난해 선정된 사업단을 대상으로 7월중 실시되며, 평가 결과 지원중단 대상으로 결정되지 않는 한, 내년 6월 30일까지 2차년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 ● 의학전문대학원 '2+4제

#### 도입 검토

우수 고교졸업생을 의과대 지망생으로 받아 2년간 일반 학부과정을 집중 이수한 뒤 4년간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밟는 학·석사 복합과정인 '2+4제' 도입이 검토된다.

또, 오는 8~9월경 '2단계 BK 21 사업' 발표에 앞서 서울대 등의·치의학전문대학원 미전환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 신청을 받으며, 경영·금융·물류 전문대학원의 경우 학과나 단과대의 일부정원을 감축하면 전환을 허용할 방침이다.

서남수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

는 “6월 22일 ‘4+4제’ 의·치의 학전문대학원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대학별로 부분적으로 ‘2+4제’ 를 도입하는 방안을 8월 말까지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4제’ 는 의학전문대학원 정원의 일정 비율을 고교졸업자 중 선발해 생명과학대나 자연과학대 등에서 2년 동안 학부과정을 집중 이수하도록 한 뒤 대학원 과정 진학을 보장하는 것으로, 졸업시에는 학·석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일종의 학·석사 복합과정으로, 미국의 경우 영재교육 차원에서 전체 의과대 정원의 5.5% 를 이렇게 선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의학계에서 ‘4+4 제’ 의 경우 의사양성 기간이 너무 길다며 전문대학원 전환을 반대하자, 기본 골격을 흔들지 않는 선에서 부분적으로 ‘2+4 제’ 도입을 검토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8월말까지 대책이 마련되면 미전환 대학을 대상으로 8~9월경에 추가 전환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서 차관보는 “2단계 BK 21 사업에서 의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생명기술 등 관련 분야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며 “2단계 사업 발표에 앞서 미

전환 대학에 다시 한번 기회를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6월 22일, 영남대(의과대와 병행)와 조선대가 추가로 의학전문대학원 전환을 신청해와 의과대는 전국 14곳 중 17곳이, 그리고 치과대는 조선대가 추가돼 11곳 중 7곳이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2008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할 수 있도록 9월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면 내년 2월 로스쿨을 인가할 ‘법학교육위원회’ 를 발족한 뒤 총 입학 정원을 3월에 결정할 계획이다.

### ● 수도권특성화사업 30개교 선정

올해부터 최고 4년간 지원하는 수도권 대학을 대상으로 한 ‘2005년도 대학특성화지원사업’ 평가 결과 경희대, 한양대, 성균관대, 중앙대, 서울대, 이화여대, 연세대 등 30개 대학 42개 사업이 선정됐다.

교육인적자원부는 6월 21일 올해 총 6백억 원이 지원되는 수도권특성화사업에 전체 73개 대학 가운데 신청서를 제출한 52개 중 대규모 12개교, 중·소규모 18개교 등 총 30개 대학이 선정, 최고 4년간 39억4천 만 원에서 최저 1

년간 8억4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각 대학이 스스로 특성화 분야를 신청하는 자유과제는 대규모 대학 12곳과 중·소규모 대학 18개교 등 30개교를 선정, 이중 17개교는 4년간, 8개교는 1년간 각각 지원한다. 올해 지원금은 5백40억 원이다.

사회적 수요를 반영한 지정과제는 인문학과 인적자원개발, 대학행정 분야 등 3개 분야에서 경희대, 한양대, 중앙대, 서울대, 연세대, 이화여대, 성균관대 등 12개교가 선정, 3억2천만 원~6억2천만 원을 4년간 지원받게 됐다.

자유과제와 지정과제를 합쳐 올해 대학별 지원금액을 보면 경희대가 39억4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양대 37억6천만 원, 성균관대 35억5천만 원, 중앙대 35억4천만 원, 서울대 34억8천만 원, 이화여대 33억2천만 원, 연세대 32억7천만 원 등의 순이었다.

뒤를 이어 동국대, 홍익대가 각각 23억5천만 원, 고려대 22억3천만 원, 서강대 22억2천만 원, 한국외대 21억9천만 원, 숙명여대 21억2천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특성화사업에서 탈락했던 경희대는 ‘정보 디스플레이 글로벌 리더 양성’ 과제로 1위로 등극해 눈길을 끌었고, 서울대, 이화

여대, 중앙대, 한양대 등은 2년 연속 사업에 선정됐다. 반면 건국대, 숭실대 등은 2년 연속 고배를 마시게 됐다.

올해 수도권특성화사업은 대학 구조조정이 강조되면서 예년과 달리 정책유도 평가영역 가운데

정원 감축과 학과 통폐합 등 '구조개혁' 지표가 20% 반영된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이번에 선정된 대학들은 평가점수에 따라 오는 2008년까지 4년간 집중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대학간 판도 변화에 귀추가

모아졌다.

교육부는 선정 대학들을 대상으로 연차평가 및 성과평가를 실시할 방침으로, 각 대학이 제시한 연도별 성과지표의 달성 여부와 예산집행 실태를 점검해 다음해 지원에 반영할 예정이다. ■